통합론 내건 민주, 좌표 설정 놓고 갈등

김효석 "국민 지지 얻을 생활정치 펴야"

親盧·강경파 "이념적 가치 선명히 해야"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이후, 야권 통합추진과 함께 9월 정기국회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이 이념 좌표와 통합 순서 등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먼저 서거정국으로 잠시 중단됐던 민주당의 이념 좌표 설립 문제는 당내에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의 노선과 정체성 재정립 작업이 이념적 성향이 다양한 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 통합이라는 변수를 만나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선 정립과 관련 민주당의 전략통이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생활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주 일본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일본 민주당의 정권교체 배경에는 지나친 이념 중심에서 벗어난 '생활정치'에서 시작되었다며 민주당도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는 진보를 당의 정체성으로 하면서도 중도와 보수 세력까지 껴안을 수 있는 생활정책 제시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민주당은 진보 색채 강화를 통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민주진영 통합론이 힘을 받으면서 진보보다는 중도 방향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구 민주계 한 의원은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와 통합을 하기 위해선 보다 포용적인 중도개혁 노선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의 정체성을 진보로 규정하면 통합도 어려워지고 그만큼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친노 진영 및 당내 강경파에서는 확고한 이념적 정체성 확립 없이는 지지층 복원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모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데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지지를 다시 견인하려면 이념적 가치를 보다 선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묘한 기류는 민주진영 통합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가 친노(親盧) 세력을 통합의 우선순위로 지목한 것과 관련,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누구를 먼저 통합하고 누구를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통합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의 선택과 단계는 없어야 한다"며 "다자 동의에 의한 동시적인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정 대표의 단계적 통합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도 "특정인의 경쟁 때문에 복당이 된다, 안된다 식의 논의가 돼선 안된다"며 복당에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던 정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두 발언하는 정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민주당 인사 입각 없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민주당 소속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당 어떤 인사도 이명박 정권의 희생물이 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우리당의 주요한 인사까지 거론해 그 분들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는 일은 잘못된 공작적 행태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이 입각하거나 이 정권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당이 우리 당 인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한,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에 대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난 국정원이 완전히 안기부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과 함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동교동-상도동 10일 모인다

서울 종로서… YS 불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가 오는 10일 한 자리에 모인다.

동교동계의 한 핵심 인사는 2일 "10일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월례 총회를 겸해 상도동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장기간 조의를 표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도동계인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가 국장 기간 고생을 했다며 식사를 같이하기로 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모임에는 동교동계의 권노갑 한화갑 김옥두 전 의원, 상도동계의 김무성 의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 두 계파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당초 지난달 26일 YS 주최로 저녁식사를 같이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49재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동교동계의 연기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YS가 참석하는 양측의 만남은 49재 이후인 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는 10일 오찬 회동과 관련해 "정치적 의미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DJ 서거 후 고조되고 있는 정치권의 '화해와 용서' 분위기 속에서 지역갈등 극복 등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이틀째 공전

여야, 국감시기 입장차

9월 정기국회가 연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국정감사 시기 등에 대한 입장차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당은 1일에 이어 2일에도 원내수석부대표 접촉 등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물밑조율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현행법 규정대로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감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석 이후인 10월초부터 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오는 4~5일 의원 연찬회를, 민주당은 3일 의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기국회 공전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전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리정치에서 벗어나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찾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과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문제 보다는 정치현안과 함께 경우에 따라 논쟁 시간이 많이 소요될 대형 문제들을 정기국회 벽두에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親盧 세력화 … 야권 지형 바뀔까

친노 인사 포진 '시민주권모임' 10일 발족

민주 중심 통합논의 움직임 변수 작용할 듯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야권을 관통하고 있는 통합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수사로 한때 '폐족' 위기에까지 몰렸던 친노진영이 '노무현 가치' 계승을 모토로 내걸고 세력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오는 10일 준비위를 발족하는 '시민주권모임'(가칭)은 안희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인사를 포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생전에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측근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당장, 친노 일각의 신당파가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주당 중심의 통합논의 움직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해찬 전 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론과 관련, "작은 차이를 넘어 '화이부동'의 자세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없이도 안되지만 민주당만으로도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민주당 중심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더 나아가 "김 전 대통령의 대통합론도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 DJ가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과는 다른 뉘앙스다.

그런 인식의 기저에는 '민주당=지역당'이라는 도식이 깔려 있다. 이 전 총리는 "지금의 민주당은 보수적이고, 호남 의존도가 너무 높다. 지역주의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친노진영의 정치세력화는 예정된 수순이며, 따라서 민주당 중심의 야권 지형도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흔들릴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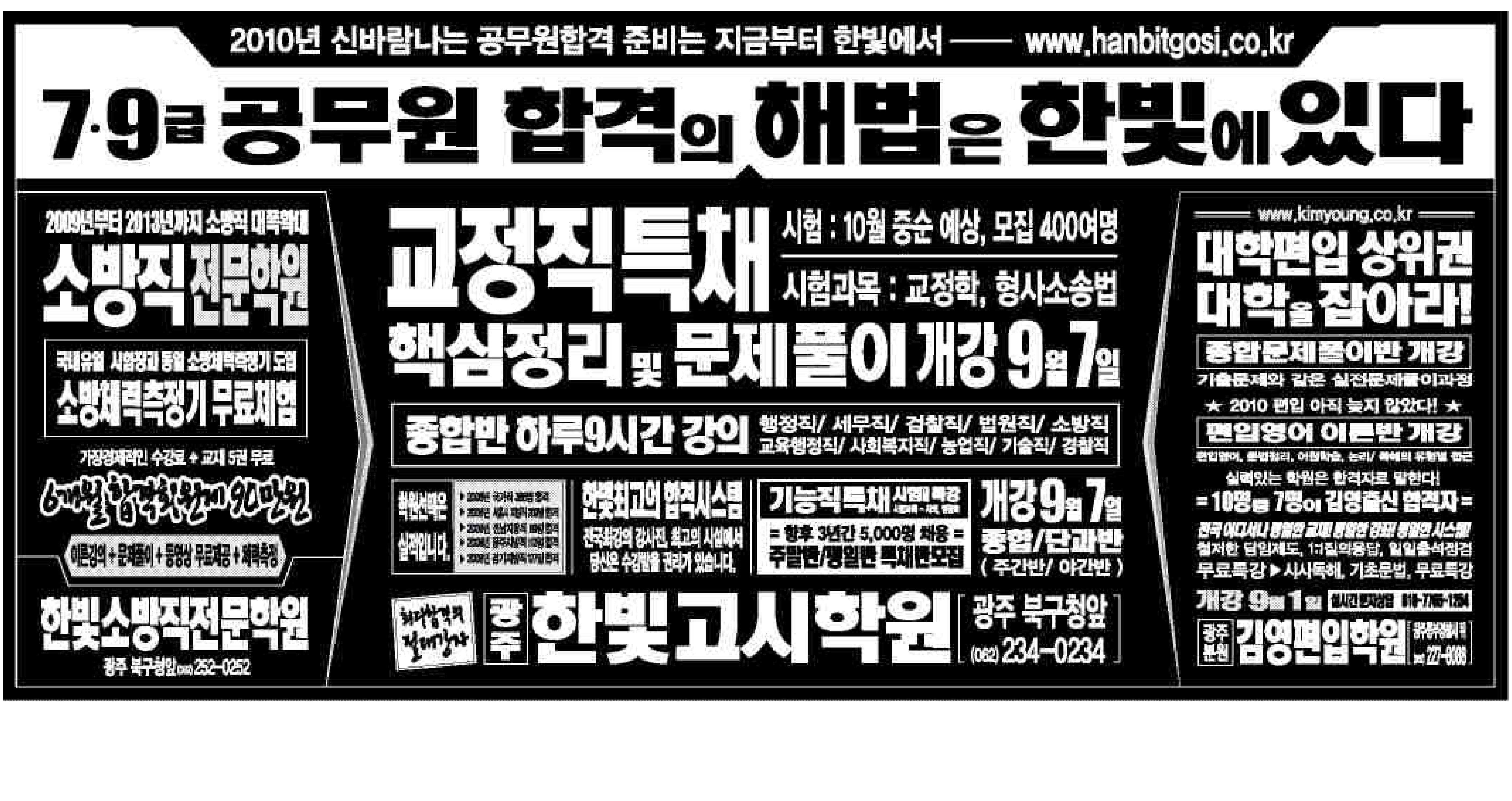
이 전 총리는 "정당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10월 재보선에서 좋은 후보가 결정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모임의 공동대표인 한명숙 전 총리부터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과 연대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출마)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지역의 한 다선 의원은 "친노진영이 전국정당을 내세우는 등 보다 개혁적이란 점에서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면 그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호남에서도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연차·정대근 등 9명 16일 선고 공판 열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한꺼번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사건을 병합해 박 전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1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박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게는 벌금 1천만원,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이 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